

출범 1년 맞은 창원특례시… 사회복지 혜택 확대 등 성과

연간 149억 복지급여 혜택 추가
소방재정 5년간 100억 추가 확보
특례시 사무 이양 등 숙제 산적

경남 창원특례시가 1월13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 혜택 확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의

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

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 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부역 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 전용 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 창업집적지 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례시 사무 이양,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전담 기구 설치 등 더딘 입법 절차와 포괄적 권한 이양, 재정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의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울산시의 지역 관광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할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12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한국관광공사, 전국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역 관광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 연면적 1038m² 규모로 설치됐다.

주요시설은 학술회의실(컨퍼런스룸), 소회의실, 상담실(컨설팅룸), 미디어룸, 기업 입주공간 등 다기능 관광혁신 거점 공간을 갖추고 관광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경북 김천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된 공동주택을 보수해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설치·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대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상하수도, 주차장 ▲보안 등, CCTV ▲운동·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등이다.

/김천(경북)=김상복 기자

의성군

기초단체 브랜드평판 군부 1위

경북 의성군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에서 3개월 연속(2022년 10~12월) 군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최근 대한민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억 1487만여 개의 빅데이터 평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의성(경북)=김상복 기자

부산시, 시내 22곳에 도시숲 조성

총 2만9000m² 면적

부산시는 올해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부산 시내 22곳에 총 2만9000m² 면적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시숲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으로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올해 도시숲 조성에 점·선·면·구조물 등 도시공간 형태별 다양 한 녹화방안을 도입해 ▲녹색쉼터 ▲

가로수조성 ▲화단녹지조성 ▲고가 하부녹화 ▲옥상녹화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주요 도시숲 조성 예정지는 ▲수영 구 팽나무 보호수 쉼터 등 녹색쉼터 유형 4곳 ▲북구 만덕1동 마을산책길 가로수 조성 등 가로수 유형 3곳 ▲해운대구 좌동 사잇길 가로화단조성 등 화단녹지 유형 11곳 ▲중구 영주고가 하부도시숲 조성 등 고가 하부녹화 유형 2곳 ▲강서구 명지노인종합복지관 등 옥상녹화 유형 2곳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목포시 부흥동과 신안군 흑산면의 자매결연 협약식.

/목포시

목포·신안 통합기반 시동… 협력체계 강화

지난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운영

목포시가 신안군과의 통합 기반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직후 서남권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발전과 30년 숙원사업인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을 신설·운영하며 통합에 대한 집중력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주민공감대가 부족해 무안반도 통합에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관(官) 주도의 일방적 추진은 지

양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신안군과의 통합을 추진해간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생조직간 자매결연, 김장김치 담그기,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민간의 교류 활성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전개되고 있다.

시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군 유치 동참 등 신안군의 현안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행정에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대구시, 자연친화 수변공간 만든다

‘금호강 르네상스’ 본격 추진

2026년까지 사업비 810억 투입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 병행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23년 선도사업의 국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선도사업 3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선도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비 810억원(국405, 시405),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 디아크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구성됐다.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선도사업의 설계용역은 내부 T/F 팀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완성도를 높여 금년 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지역혁신형’, ‘상생기반 대응형’, ‘지역포용형’ 3가지 분야에 서 지자체 신청 사업을 선정했다.

나주시가 선정된 사업은 상생기반 대응형 분야로 청년의 창업 초기 성장과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올해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5600만원

을 투입, 올해 창업을 희망하는 1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나주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국비 5000만원 확보

나주시가 청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청년들의 초기 창업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사업부문에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들의 소득 안정, 창업에 따른 추가